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1/11 통권 1605호

2023년 시행 개정 조세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 목 차

▶ 2023년 개정세법 내용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 항목 엄선	p.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p.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p.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p.3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p.9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p.11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p.133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p. 116

AnSe, Creates the Best Answer
eAnSe.com 의 30분 내 Q&A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2023년 개정세법 중 기업영향 주요 내용

- ▷ 중소기업의 일반법인 등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함(법인법 § 14)
- ▷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20% 미만인 경우 30% 익금불산입, 그밖의 경우에는 80%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법인법 § 18의2)
- ▷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법인법 § 25)
- ▷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율을 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함(법인법 § 55)
- ▷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상향함(소득법 § 52)
-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1천2백만원 이하에서 1천4백만원으로 조정하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소득법 § 55)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소득법 § 59의2)
-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한도 구분을 없애고 개인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시 9백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함(소득법 § 59의3)
-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를 6백억으로 상향조정함(상증법 § 18의2)
- ▷ 중견기업 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6%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8%로 상향함(조특법 § 24)
-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조특법 § 126의2)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p>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p>
<p>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p>
<p>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p>
<p>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p>
<p>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p>
<p>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p>
<p>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75조의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p>	<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p>



현행	개정
<p>른 연결법인을 <u>완전 지배</u>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p> <p>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u>완전 지배</u>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른 연결법인을 <u>연결지배</u>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p> <p>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u>연결지배</u>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p> <p>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p> <p>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p> <p>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p> <p>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p> <p>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p>
<p>11. ~ 16. (생략)</p> <p>●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 제18조 【평가이의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략)</p> <p>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p>	<p>11. ~ 16. (현행과 같음)</p> <p>●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8조 【평가이의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p>

현행	개정																													
<p>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u>배당</u>.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p> <p>● 제18조의2 【<u>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u>】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p> <table><tr><th>피출자법인의 구분</th><th>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tr><td>가.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td><td>100퍼센트</td><td>100퍼센트</td></tr><tr><td></td><td>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td><td>50퍼센트</td></tr><tr><td></td><td>30퍼센트 미만</td><td>30퍼센트</td></tr><tr><td>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td><td>100퍼센트</td><td>100퍼센트</td></tr><tr><td></td><td>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td><td>50퍼센트</td></tr><tr><td></td><td>50퍼센트 미만</td><td>30퍼센트</td></tr></table> <p>2. (생략)</p>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p> <p>3. ~ 5. (생략)</p> <p>③ (생략)</p> <p>● 제18조의3 【<u>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u>】 (생략)</p>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p>받을 금액</p> <p>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u>배당금액</u>(<u>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u>).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p> <p>● 제18조의2 【<u>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u>】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p> <table><tr><th>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th><th>익금불산입</th></tr><tr><td>50퍼센트 이상</td><td>100퍼센트</td></tr><tr><td>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td><td>80퍼센트</td></tr><tr><td>20퍼센트 미만</td><td>30퍼센트</td></tr></table> <p>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p>		<p>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5. (생략) 		<p>●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생략)</p> <p>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u>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u> 중 제1호에 따른 <u>기부금</u>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u>다음</u>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 바. (생략)</p> <p>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u>기부금</u>과 제3항제1호에 따른 <u>기부금</u>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50퍼센트</p> </div> <p>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u>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u> 중 제1호에 따른 <u>기부금</u>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u>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u>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p>6.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현행과 같음)</p> <p>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u>기부금</u> 중 제1호에 따른 <u>특례기부금</u>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u>특례기부금</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u>특례기부금</u>과 제3항제1호에 따른 <u>일반기부금</u>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50퍼센트</p> </div> <p>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u>기부금</u> 중 제1호에 따른 <u>일반기부금</u>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u>일반기부금</u> : <u>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u>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p>



현행	개정
<p>[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 제25조 【<u>접대비의 손금불산입</u>】 ① 이 조에서 "<u>접대비</u>"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u>접대비</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u>접대비</u>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접대비</u>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가. 나. (생략)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u>접대비</u>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p>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u>접대비</u>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u>접대비</u>(제2</p>	<p>[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5조 【<u>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u>】 ① 이 조에서 "<u>기업업무추진비</u>"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가. 나. (현행과 같음)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p>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u>기업업무추진비</u>"로 보지 아니한다.</p> <p>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p>

현행	개정
<p>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⑤ (생략)</p> <p>⑥ <u>절대비</u>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u>기부금</u>(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1. ·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u>잔액</u>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⑥ (생략)</p> <p>⑦ 제5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⑧ ~ ⑩ (생략)</p> <p>●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u>내국법인</u>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u>보험업법</u>」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 ④ (생략)</p>	<p><u>진비</u>”(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기업업무추진비</u>"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u>일반기부금</u>(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제5호의 경우에는 <u>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5항제4호·제5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p>●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u>내국법인</u>(「<u>보험업법</u>」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u>수산업협동조합법</u>」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32조 【<u>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u>】 ① 한다)가 <u>해약환급금준비금</u>(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p>



현행	개정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생략)</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p> <p>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p>	<p>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 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p> <p>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p> <p>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p> <p>① ~ ④ (생략)</p>	<p>●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2. (생략)</p> <p>⑥ ~ ⑧ (생략)</p> <p>●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① ~ ④ (생략)</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2. (생략)</p> <p>⑥ ~ ⑧ (생략)</p> <p>●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배당가능이익</u>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9. (생략)</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배당가능이익</u>(이하 이 조에서 "<u>배당가능이익</u>"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u>배당금액</u>"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u>초과배당금액</u>"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p>



현행	개정
<p><신설></p> <p>●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생략)</p> <p>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 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p>●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후단 삭제></p> <p><삭제> <삭제> <삭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생략)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 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p>	<p>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일 것</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p>

현행	개정
<p><u>조합 및 투자익명조합</u> <u>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u> <u>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u>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p>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p> <p>B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p> <p>C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p> </div>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① (생략)</p> <p>1. (생략)</p> <p>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p> <p>② ~ ④ (생략)</p> <p>●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p>	<p>●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p>



현행	개정
<p>계산한 금액에 ……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p> <p>1. 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p>	<p>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p> <p>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p> <p>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p> <p>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하</p>

현행	개정
<p>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25조제2항에 따른 <u>접대비</u>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p> <p>2. (생략)</p> <p>③ (생략)</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⑨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25조제2항에 따른 <u>기업업무추진비</u>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p>



현행	개정
<p>가. (생략)</p> <p>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p> <p>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나.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명세서가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금액</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p> <p>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p>

현행	개정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다른 내국법인을 <u>완전 지배</u>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u>완전모법인</u>"(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u>완전자법인</u>"(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완전모법인의</u>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u>완전자법인</u>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u>완전자법인</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① (생략)</p>	<p>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① 다른 내국법인을 <u>연결지배</u>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u>연결가능모법인</u>"이라 한다]과 그 다른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u>연결가능자법인</u>"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연결가능모법인의</u>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u>연결가능자법인</u>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u>연결가능자법인</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⑥ (생략)</p> <p>●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생략)</p> <p>2. 연결모법인이 <u>완전 지배</u>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p> <p>3. 연결모법인의 <u>완전자법인</u>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4. · 5. (생략)</p> <p>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u>완전 지배</u>를 받는 경우</p> <p>② ~ ⑥ (생략)</p> <p>● 제76조의11【<u>연결자법인의 추가</u>】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u>완전 지배</u>하게 된 경우에는 <u>완전 지배</u>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u>완전 지배</u>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 제76조의12【<u>연결자법인의 배제</u>】① 연결모법인의 <u>완전 지배</u>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 제76조의13【<u>연결과세표준</u>】① 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76조의14【<u>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u>】① (생략)</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p> <p>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p>	<p>1. (현행과 같음)</p> <p>2. 연결모법인이 <u>연결지배</u>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p> <p>3. 연결모법인의 <u>연결기능자법인</u>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4. · 5. (현행과 같음)</p> <p>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u>연결지배</u>를 받는 경우</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1【<u>연결자법인의 추가</u>】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u>연결지배</u>하게 된 경우에는 <u>연결지배</u>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u>연결지배</u>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2【<u>연결자법인의 배제</u>】① 연결모법인의 <u>연결지배</u>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3【<u>연결과세표준</u>】① 각 연결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4【<u>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u>】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p> <p>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p>

현행	개정
<p>액을 익금에 산입</p> <p>나. 기부금과 <u>절대비</u>의 손금불산입 조정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u>절대비</u>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p> <p>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p> <p>가. (생략)</p> <p>나. <u>절대비</u>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u>절대비</u>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p> <p>다.·라. (생략)</p> <p>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u>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u>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p> <p>② (생략)</p> <p>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u>완전자법인이 된</u> (<u>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u>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나. (생략)</p> <p>2. (생략)</p> <p>③ (생략)</p> <p>●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u>완전자법인</u>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산입</p> <p>나. 기부금과 <u>기업업무추진비</u>의 손금불산입 조정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u>기업업무추진비</u>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p> <p>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기업업무추진비</u>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u>기업업무추진비</u>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p> <p>다.·라. (현행과 같음)</p> <p>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u>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u>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p> <p>② (현행과 같음)</p> <p>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u>연결가능자법인이 된</u>(<u>설립등기일부터 연결가능자법인이 된</u>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u>연결가능자법인</u>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u><신설></u></p> <p>●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① ~ ⑥ (생략)</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p> <p>⑧ (생략)</p> <p>●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나. (생략)</p> <p>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p> <p>라. 마. (생략)</p> <p>3. ~ 6. (생략)</p> <p>7. (생략)</p> <p>가. (생략)</p> <p>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p> <p>8. ~ 10. (생략)</p>	<p>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p> <p>●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p> <p>라. 마. (현행과 같음)</p> <p>3. ~ 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p> <p>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p>

현행	개정
	<p>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제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제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p>	<p>〈신설〉</p> <p>●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①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제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제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p>
<p>●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p>



현행	개정
<p>●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생략)</p> <p>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다. (생략)</p> <p>② (생략)</p> <p>③ ~ ⑮ (생략)</p>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한다.</p> <p>●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p> <p>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 ⑮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p>

현행	개정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p>	<p>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를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p>



현행	개정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를 <u>적용신청서</u>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u>제한세를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u>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u>신고서</u>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u>제한세를 적용신청서</u>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u>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생략)</p>	<p>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를 <u>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u>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u>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u>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u>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u>,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u>신청서등</u>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u>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u></p> <p>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p> <p>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p>

현행	개정
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① 제12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제9호·제10호·제10호의2, 제18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5조(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제75조의7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을 개정하는 부분,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16조제3항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p>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본준비금의 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7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57조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매입자발행계산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등 보험회사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현행	개정
제8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7조의2,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및 제7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제3항·제4항·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7제1항·제3항·제4항·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5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제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제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제17조 【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25조의

현행	개정
<p>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p> <p>제18조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9조 【외국 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0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대행·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
<p>●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7. (생략)</p> <p>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p> <p>9. ~ 20. (생략)</p> <p>② (생략)</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생략)</p> <p>② (생략)</p> <p>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p> <p>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p> <p>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p> <p>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p> <p>9. ~ 2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p> <p>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p>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p> <p>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p>



현행	개정
<p><u><신설></u></p> <p><u><신설></u></p> <p>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6. <u>접대비</u>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p>	<p><u>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기업업무추진비</u>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p>

현행		개정
7.·8. (생략) ②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익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익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형장소의 경영자	102분의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6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2	102분의2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략)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설></div>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



현행	개정
<p>④ (생략)</p> <p>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⑥ (생략)</p> <p>●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⑥ (생략)</p> <p>●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① (생략)</p> <p>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p> <p>1. (생략)</p> <p>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 해당 결정 또는 결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6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p> <p>③ ~ ⑤ (생략)</p> <p>● 제75조【자료제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p> <p>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⑦ (종전의 제6항과 같음)</p> <p>●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 해당 결정 또는 결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7항 전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자료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p>

현행	개정
<p>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 제76조 【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생략)</p>	<p>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 제76조 【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p> <p>②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6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제1항, 제68조의2제2항제2호, 제75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p> <p>2.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p> <p>제2조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자료제출 및 시정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 【접대비 명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 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7'로 각각 상향함.

아.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5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121조의17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을 추가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함.

파.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현행	개정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생략)</p> <p>바. (생략)</p> <p>3.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p>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바.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p>



현행	개정
<p>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p> <p>1. 감면 요건</p> <p>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p> <p>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p> <p>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p> <p>2. 감면 비율</p> <p>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p> <p>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p> <p>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p>

현행	개정
<p>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2. (생략) ②·③ (생략)</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p>



현행	개정
<p>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⑥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p>	<p>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p>

현행	개정
<p>③ ~ ⑩ (생략)</p> <p>●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① (생략)</p> <p>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p>	<p>지 아니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① (현행과 같음)</p> <p>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현행과 같음)</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p>



현행	개정
<p>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u>10</u>을 한도로 한다.</p> <p>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 (생략)</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p>	<p>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u>30</u>을 한도로 한다.</p> <p>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p>

현행	개정
<p>가. 해당 내국법인과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p> <p>나.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p> <p>다. 인수일 당시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p> <p>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p> <p>가. 해당 내국법인과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p> <p>나.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다. (생략)</p> <p>④ (생략)</p> <p>1. 인수일 당시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p> <p>2.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p> <p>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u>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p> <p>⑤ (생략)</p>	<p>가. 해당 내국법인과 <u>인수대상외국법인</u>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p> <p>나.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p> <p>다. 인수일 당시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u>인수대상외국법인</u>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p> <p>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p> <p>가. 해당 내국법인과 <u>인수대상외국법인</u>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p> <p>나.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다.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인수일 당시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p> <p>2. <u>인수대상외국법인</u>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p> <p>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u>인수대상외국법인</u>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⑦·⑧ (생략)</p> <p>●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① (생략)</p> <p>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② (생략)</p>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 제14조【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⑥ (생략)</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p>	<p>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① (현행과 같음)</p> <p>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14조【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p>

현행	개정
<p>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u>2022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u>2022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p> <p>1.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p> <p>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p>	<p>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p>



현행	개정
<p>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 ②·③ (생략)</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⑤ (생략) 1.·2. (생략) ⑥·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략)</p> <p>●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p>	<p>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p>

현행	개정
<p>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u>5년이</u>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생략)</p> <p>1. (생략)</p> <p>2. 공제금액</p> <p>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p> <p>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p>	<p>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u>10년이</u>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제금액</p> <p>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p> <p>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p>



현행	개정
<p>다)의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u>상영된</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 ③ (생략)</p> <p>● 제27조【<u>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u>】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u>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27조【<u>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u>】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u><신설></u>	
<p>● 제28조의4【<u>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u>】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p>	<p>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29조의3【<u>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u>】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⑥ (생략)</p> <p>● 제29조의4【<u>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u>】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p>	<p>● 제29조의3【<u>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u>】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4【<u>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u>】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p>

현행	개정
<p>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2.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⑥ (생략)</p> <p>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생략)</p>	<p>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p>	<p>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p>



현행	개정
<p>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p> <p>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p> <p>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850만원</p> <p>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950만원</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p>	<p>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p> <p>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p>

현행	개정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 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생략)</p> <p>●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② (생략)</p> <p>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u>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 4. (생략)</p> <p>③·④ (생략)</p> <p>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p> <p>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② (생략)</p> <p>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u>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u></p> <p>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 6. (생략)</p> <p>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p> </div> <p>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p> <p>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p> </div> <p>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p> <p>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p>

현행	개정
<p>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여반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p>	<p>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p>
<p>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1. 2.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p> <p>⑤ ~ ⑦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p> <p>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p> <p>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p> <p>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p> <p>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p>	<p>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p> <p>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p> <p>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p> <p>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p>

현행	개정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p>	<p>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p> <p>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p> <p>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생략)</p> <p>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p> <p>3. 4.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p>	<p>●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p>



현행	개정
<p>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삭제</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⑥ (생략)</p> <p>●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② (생략)</p> <p>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삭제</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1. 수도권과밀억제권역</p> <p>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u>2022년 12월 31일</u>(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보유하고 <u>2022년 12월 31일</u>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 ⑨ (생략)</p> <p>●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u>2022년 12월 31일</u>(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보유하고 <u>2022년 12월 31일</u>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p>	<p>●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u>2025년 12월 31일</u>(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보유하고 <u>2025년 12월 31일</u>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8년 12월 31일</u>)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u>2025년 12월 31일</u>(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보유하고 <u>2025년 12월 31일</u>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p>



현행	개정
<p>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 ⑦ (생략)</p> <p>●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 ③ (생략)</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p>	<p>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8년 12월 31일</u>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p> <p>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p> <p>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p>

현행	개정
<p>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p>	<p>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p>



현행	개정
<p>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u>2022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u>접대비</u>(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p> <p>1. ~ 8.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u>접대비</u>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u>수익사업만</u>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u>문화예술단체</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p>	<p>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u>기업업무추진비</u>(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u>제29조의8제3항·제4항</u>,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u>기업업무추진비</u>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u>수익사업만</u> 해당하고, <u>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u>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u>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u>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현행	개정
<p>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p> <p>가. ~ 마. (생략)</p> <p>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p> <p>9.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2. (생략)</p> <p>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p> <p>1.·2.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법인</p> <p>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p> <p>〈삭제〉</p> <p>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p> <p>9.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현행	개정
<p>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⑧ (생략)</p> <p>●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③ (생략)</p> <p>●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u>사업소득자</u>(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2.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p>⑥ ~ ⑪ (생략)</p> <p>●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p>	<p>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u>자</u>(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p> <p>⑥ ~ ⑪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p>

현행	개정
<p>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생략)</p> <p>⑬ (생략)</p> <p>1.·2. (생략)</p> <p>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한도액 = $[A - (B + C)] \times 100$분의 30</p> <p>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 소득금액</p> <p>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p> <p>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p> </div> <p>⑭ (생략)</p> <p>●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p>	<p>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한도액 = $[A - (B + C)] \times 100$분의 30</p> <p>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 소득금액</p> <p>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p> <p>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p> </div> <p>⑭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p>



현행	개정
<p>……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p> <p>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p> <p>2. ~ 4. (생략)</p> <p>② ~ ⑥ (생략)</p> <p>●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 ,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p>	<p>……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5</p> <p>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 ,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p>

현행	개정
<p>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 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p> <p>2. (생략)</p> <p>② ~ ⑬ (생략)</p>	<p>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 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 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⑬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 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 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 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 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 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 다.</p> <p>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p> <p>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p>	<p>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p> <p>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 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p> <p>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p> <p>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p> <p>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p> <p>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 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 리, 계좌 운용·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p>

현행	개정
<p>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p> <p>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p> <p>●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p>	<p>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서 삭제></p> <p>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생략)</p> <p>1) (생략)</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단서 신설></p> <p>3) ~ 5) (생략)</p> <p>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② ~ ⑧ (생략)</p> <p>●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략)</p> <p>1. (생략)</p> <p>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3) ~ 5) (현행과 같음)</p> <p>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p>

현	행	개	정
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징수곤란 채납액을 관할하는 …… 범 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징수곤란 채납액을 관할하는 …… 범 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u> <u>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022년 7월 25일</u>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생 략)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 차·예금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u>2억원</u>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 차·예금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u>2억4천만원</u> 미만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u>직계존 속</u> 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u>직계존 속 또는 직계비속</u> 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부에 따른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 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 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단독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목별	총급여액 등
가	400만원 미만	가	400만원 미만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2천200만원 미만	다	900만원 2천2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u>400분의 150</u>		총급여액 등× <u>400분의 165</u>
	150만원		165만원
	15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u>1천300분 의 150</u>		165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u>1천300분 의 165</u>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 금액	



현행			개정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times 700분의 260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times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times 1천 800분의 260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times 1천 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times 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times 2천 100분의 30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times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 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times 2천 100분의 330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⑤ (생략)

● 100조의18【**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①·② (생략)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 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생략)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100조의18【**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 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p>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u>2억원</u> 미만일 것</p> <p>②·③ (생략)</p> <p>●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tr><th>목별</th><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가</td><td>2천1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70만원</td></tr><tr><td>나</td><td>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20]</td></tr></table> <p>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tr><th>목별</th><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가</td><td>2천5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70만원</td></tr><tr><td>나</td><td>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20]</td></tr></table> <p>②·③ (생략)</p> <p>●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다음 각 목의</p>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20]	<p>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u>2억4천만원</u> 미만일 것</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tr><th>목별</th><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가</td><td>2천1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80만원</td></tr><tr><td>나</td><td>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30]</td></tr></table> <p>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tr><th>목별</th><th>총급여액 등</th><th>자녀장려금</th></tr><tr><td>가</td><td>2천500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80만원</td></tr><tr><td>나</td><td>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td><td>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30]</td></tr></table> <p>②·③ (생략)</p> <p>●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① <u>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p>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3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3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2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2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1천900분의 3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1천500분의 30]																																					



현행	개정
<p>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p> <p>가. ~ 다. (생략)</p> <p>2. (생략)</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p> <p>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p> <p>⑥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p> <p>⑦ ~ ⑩ (생략)</p>	<p><u>다</u>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u>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에 따른</u>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p> <p>⑤ <u>제1항에 따른</u>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p> <p>⑥ <u>제5항에 따라</u>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u>그 다음</u>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04조의5【<u>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u>】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p> <p>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p>	
<p>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p>	
<p>● 제104조의25【<u>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u>】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p>	
<p>● 제104조의25【<u>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u>】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p>	

현행	개정
<p>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 제104조의30【우수 선회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2. (생략)</p> <p>② ③ (생략)</p> <p>●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8.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은 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30【우수 선회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p>



현행	개정
<p><신설></p> <p>●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 13.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p>1. ~ 22. (생략)</p> <p>③ ~ ⑤ (생략)</p> <p>●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p>	<p>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p>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p> <p>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p> <p>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p> <p>1. ~ 2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1. 2. (생략) ② ~ ②② (생략)</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 (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p> <p>●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③ (생략)</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 ② (생략)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p>	<p>1.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 (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p>



현행	개정
<p>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 ⑫ (생략)</p> <p>●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⑥ (생략)</p> <p>●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① 「해운법」 제24조</p>	<p>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② ~ ⑫ (현행과 같음)</p> <p>●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① 「해운법」 제24조</p>

현행	개정
제1항에 따라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1항에 따라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p>●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생략)</p>	<p><삭제></p>
<p>●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① (생략)</p> <p>1. 2. (생략)</p> <p>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p> <p>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p> <p>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생략)</p> <p>② (생략)</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 2022년 12월 31일</p> <p>2. ~ 4.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 2025년 12월 31일</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p>	<p>●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p>



현행	개정
<p>⑥·⑦ (생략)</p> <p>●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생략)</p> <p>1. ~ 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 ⑩ (생략)</p> <p>●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주장 등】① (생략)</p> <p>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③ (생략)</p> <p>●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주장 등】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현행	개정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④ ~ ⑦ (생략)</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4. (생략)</p> <p>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 항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p>	<p>(이하 이 조에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 항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p> <p>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현행	개정
<p>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가. (생략)</p> <p>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 전통신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신장사용분,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p> <p>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 전통신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신장사용분,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p> <p>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p>

현행	개정
<p>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p> <p>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40</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등사용분</u>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p> <p>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u>전통시장사용분</u>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40</p> <p>2) (현행과 같음)</p> <p>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p>



현행	개정
<p>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 ~ ⑨ (생략)</p> <p>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u></p>	<p>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100분의 40+(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도서등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100분의 80</p> <p>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15+직불카드등사용분×100분의 30+(전통시장사용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100분의 40+(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100분의 80</p> <p>7. (생략)</p> <p>8.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p> <p>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p> <p>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p> <p>③ ~ ⑨ (생략)</p> <p>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u>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u></p>

현행	개정
<p>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 ⑥ (생략)</p>	<p>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⑪ 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p> <p>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250만원</p> <p>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연간 200만원</p> <p>●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①·② (생략)</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① (생략)</p> <p>1. 2. (생략)</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p>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현행	개정
<p>4.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생략)</p> <p>③ · ④ (생략)</p> <p>● 제136조 【<u>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u>】</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u>접대비</u>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u>접대비</u>(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u>접대비</u>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u>접대비</u>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u>접대비</u>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u>접대비를</u>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p> <p>(표 생략)</p> <p>⑤ (생략)</p> <p>● 제140조 【<u>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u>】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u>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u>,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36조 【<u>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u>기업업무추진비</u>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u>기업업무추진비</u>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u>기업업무추진비</u>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표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40조 【<u>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u>】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p>



현행	개정
<p>한다.</p> <p>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제7조의2, 제7조의4,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④ (생략)</p> <p>●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정】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 ⑤ (생략)</p>	<p>한다.</p> <p>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제7조의2, 제7조의4,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정】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p> <p>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p> <p>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p>	

현행	개정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의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을 제고함.

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함.

현행	개정
<p>●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u>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u></p> <p>3. (생략)</p> <p>③ (생략)</p> <p>●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생략)</p> <p>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u>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다. ~ 사. (생략)</p> <p>3. ~ 5. (생략)</p> <p>●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생략)</p> <p>1. (생략)</p> <p>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u>제57조부터 제59조까지</u>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u>제57조부터 제59조까지</u>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p> <p>3. (생략)</p> <p>●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u>이익. 다만, 제87조의6제1항제4호의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u></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u>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u>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다. ~ 사. (현행과 같음)</p> <p>3. ~ 5. (현행과 같음)</p> <p>●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u>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u>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u>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u>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u>이익 <단서 삭제></u></p>



현행	개정
<p>로 한정한다.</p> <p>5의2. ~ 10. (생략)</p> <p>② ~ ⑥ (생략)</p> <p>●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생략)</p> <p>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p> <p>2. ~ 15.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생략)</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나. (생략)</p> <p>2. (생략)</p> <p>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④ (생략)</p> <p>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필요경비에 산</p>	<p>5의2. ~ 10.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현행과 같음)</p> <p>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p> <p>2. ~ 1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필</p>

현행	개정
<p>입할 수 있다. ⑥·⑦ (생략)</p> <p>● 제35조【<u>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u>】① 이 조에서 "<u>접대비</u>"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u>접대비</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u>접대비</u>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접대비</u>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가. 나. (생략)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u>접대비</u> 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p>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u>접대비</u>(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p> <p>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u>접대비</u>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u>접대비</u>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7조【<u>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u>】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p>	<p>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35조【<u>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u>】① 이 조에서 "<u>기업업무추진비</u>"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가. 나. (현행과 같음)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u>기업업무추진비</u> <p>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u>기업업무추진비</u>(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u>기업업무추진비</u>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u>기업업무추진비</u>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7조【<u>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u>】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p>



현행	개정																				
<p>다.</p> <p>⑥ (생략)</p> <p>●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생략)</p> <p>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p> <table border="1"> <tr> <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30만원×근속연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td></tr> </table>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③ (생략)</p> <p>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2. (생략)</p> <p>⑤ ~ ⑪ (생략)</p> <p>●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생략)</p> <p>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p>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48조【퇴직소득공제】① (현행과 같음)</p> <p>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p> <table border="1"> <tr> <th>근속연수</th><th>공제액</th></tr> <tr> <td>5년 이하</td><td>100만원×근속연수</td></tr> <tr> <td>5년 초과 10년 이하</td><td>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td></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td>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td></tr> <tr> <td>20년 초과</td><td>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td></tr> </table>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⑤ ~ ⑪ (현행과 같음)</p> <p>●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p> <p>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p> <p>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p> <p>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p> <p>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p>	<p>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p>A :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p> <p>B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p> <p>C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p> </div>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8조 【재매손실세액공제】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2 및 제5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 ⑧ (생략)</p> <p>●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생략)</p>	<p>● 제58조 【재매손실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1. 2. (생략)</p> <p>3. 총급여액이 <u>7천만원을 초과하는</u>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생략)</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 이하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p>	<p>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총급여액이 <u>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u>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p> <p>4. 총급여액이 <u>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u> 경우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 이하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u>학교</u>에 지급한 교육비</p> <p>나. ~ 라. (생략)</p> <p>2. · 3. (생략)</p> <p>④ (생략)</p> <p>1. 제34조제2항제1호의 <u>기부금</u></p> <p>2. 제34조제3항제1호의 <u>기부금</u>.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 나. (생략)</p> <p>⑤ ~ ⑦ (생략)</p> <p>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p> <p>⑨ ~ ⑪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u>학교</u>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별기부금</p> <p>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p> <p>⑨ ~ ⑪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p> <p>1. 종합소득 결정세액</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p> <p>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p>
<p>●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p>	<p>●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p>

현	행	개	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생략)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 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

현행	개정
<p><u><신설></u></p> <p><u><신설></u></p> <p>●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p> <p>3. 4. (생략)</p> <p>● 제87조의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p> <p><u><신설></u></p>	<p>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p> <p>3. 4.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p>



현행	개정
<p><u><신 설></u> <u><신 설></u></p> <p>●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① (생략)</p> <p>1. ~ 3. (생략)</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u>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u></p> <p>5.·6. (생략)</p> <p>② (생략)</p> <p>●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① ~ ③ (생략)</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u>2023년 1월 1일 이후</u>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u>2022년</u>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p>⑤ (생략)</p> <p>●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② (생략)</p> <p>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u>따른</u>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1.·2. (생략)</p> <p>④ (생략)</p> <p>●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① 집</p>	<p><u>나. 채권등의 상환</u> <u>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u></p> <p>●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u>이익</u></p> <p>5.·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u>2025년 1월 1일 이후</u>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u>2024년</u>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u>따른</u>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① 집</p>

현행	개정
<p>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생략)</p> <p>●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①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가. 나. (생략)</p> <p>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소득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① (생략)</p> <p>1. 2. (생략)</p> <p>3.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p>	<p>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한 소득금액</p> <p>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p>



현행	개정
<p>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p> <p>2. 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p> <p>③ (생략)</p> <p>● 제87조의27【준용규정】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74조, …….,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은 "1년"으로 본다.</p> <p>●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1.·2. (생략)</p> <p>⑤ (생략)</p> <p>●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생략)</p> <p>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27【준용규정】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 제60조, 제61조, 제74조, …….,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p> <p>●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현행과 같음)</p> <p>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table>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200만원 이하</td><td>16퍼센트</td></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td>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td></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td></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td></tr> </table> <p>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p> <table>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200만원 이하</td><td>16퍼센트</td></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td>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td></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td></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td></tr> </table> <p>10. ~ 14. (생략)</p>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p>●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table>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400만원 이하</td><td>16퍼센트</td></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td>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td></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td></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td></tr> </table> <p>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p> <table> <tr> <th>양도소득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1,400만원 이하</td><td>16퍼센트</td></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td>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td></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td>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td></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td></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td></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td></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td></tr> <tr> <td>10억원 초과</td><td>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td></tr> </table> <p>10. ~ 14. (현행과 같음)</p>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현행	개정
<p>② ~ ⑧ (생략)</p> <p>●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나. (생략)</p> <p>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p> <p>라. 마. (생략)</p> <p>3. ~ 8의2. (생략)</p> <p>9. (생략)</p> <p>가. (생략)</p> <p>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p> <p>10. ~ 12. (생략)</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p> <p>라. 마. (현행과 같음)</p> <p>3. ~ 8의2.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0. ~ 1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p>	
<p>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p> <p>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p>	

현행	개정
<p>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p>	<p>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p> <p>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p>
<p>●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만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만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p>	<p>●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
<p>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 익명조합</p> <p>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 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p> <p>3.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p> <p>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 인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 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 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 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 액으로 한다.</p> <p>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 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p> <p>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p> <p>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p>A :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세</p> <p>B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p> <p>C :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p> </div> <p>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p>
<신 설>	

현행	개정
<p><u><신 설></u></p> <p>●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제148조의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생략)</p> <p>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③ ~ ⑦ (생략)</p> <p>●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 ⑩ (생략)</p> <p>●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p>	<p>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48조의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p>



현행	개정
<p>자는 그 <u>신청서를</u>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u>비과세·면제신청서를</u>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u>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u>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u>신청서</u>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소득지급자는</u>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u>비과세·면제신청서</u>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u>신청서등을</u>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u>신청서등을</u>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u>함께</u>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u>신청서등을</u>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p>

현행	개정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② (생략)</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생략)</p>	<p>정한다.</p> <p>●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p>④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p>	<p>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 ⑥ (생략)</p> <p>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p> <p>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징</p>	<p>●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출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p> <p>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 ⑤ (생략)</p>	<p>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출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p> <p>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p> <p>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 **【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30일 (금)	1월 2일 (월)	1월 3일 (화)	1월 4일 (수)	1월 5일 (목)
미 달 러 (USD)	1267.30	1267.30	1268.90	1272.10	1274.70
일 본 엔 (JPY)	953.18	968.55	971.93	970.77	962.62
영 국 파 운 드 (GBP)	1527.67	1529.25	1531.18	1523.02	1537.35
캐 나 다 달 러 (CAD)	935.38	935.21	935.22	930.71	945.69
홍 콩 달 러 (HKD)	162.55	162.27	162.54	162.80	163.07
위 안 화 (CNH)	181.44	181.44	183.20	184.01	184.68
유 로 화 (EUR)	1351.20	1355.25	1355.31	1342.45	1351.95
호 주 달 러 (AUD)	858.41	864.11	963.74	855.74	871.13
싱 가 폴 달 러 (SGD)	943.11	947.44	945.49	945.83	950.1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49	187.70	288.06	288.72	289.67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p> <p>7. ~ 1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 7. (생략)</p> <p>●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p>	<p>●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p> <p>7. ~ 1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3. ~ 7. (현행과 같음)</p> <p>●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p>

현행	개정
<p>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생략)</p> <p>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공익법인등 : 100분의 5</p> <p>다. (생략)</p> <p>③ ~ ⑤ (생략)</p> <p>●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p> <p>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p> <p>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p> <p>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p>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p>	<p>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비율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공익법인등 : 100분의 5</p> <p>다.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p>



현행	개정
<p>경우 : 500억원</p> <p>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현행	개정
<p>가. 해당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p> <p>나. 해당 상속인이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p> <p>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p> <p>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p>	



현행	개정
<p><u>달하는 경우</u></p> <p>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용 자산, 기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용 자산의 범위,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제2항제1호의 기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p>	

현행	개정
<p>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p>	
<p><신설></p>	
<p>●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p> <p>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p> <p>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p>	<p>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p>



현행	개정
<p>속세에 가산한다.</p> <p>1. 기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p> <p>2.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 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 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p> <p>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p> <p>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p> <p>⑥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용 자산, 기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용 자산의 범위, 기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기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경영과 관련</p>	<p>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p> <p>2.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p>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18조의4【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p>	<p>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p>●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녀(태아를 포함한다)</u>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u>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1천



현행	개정
<p>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3.·4. (생략)</p> <p>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p> <p>② (생략)</p> <p>●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생략)</p> <p>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p> <p>2. (생략)</p> <p>② (생략)</p> <p>●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p> <p>1.·2. (생략)</p>	<p>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3.·4. (생략)</p> <p>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현행과 같음)</p> <p>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 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 ~ ⑤ (생략)</p> <p>●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① ~ ③ (생략)</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① (생략)</p> <p>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생략)</p> <p>● 제70조【자진납부】① (생략)</p> <p>1. ~ 4. (생략)</p> <p>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u><신설></u></p> <p>② (생략)</p> <p>● 제71조【연부연납】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70조【자진납부】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p> <p>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연부연납】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p>



현행	개정
<p>납 허가일부터 <u>10년</u>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u>7년</u>.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p> <p>나. <u>그 외의 경우</u>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접 이 조에서 같다)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u>20년</u>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u>10년</u>이 되는 날부터 <u>10년</u>. <단서 삭제></p> <p>나. <u>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u>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72조의2【<u>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u>】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p> <p>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p> <p>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p> <p>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p> <p>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p> <p>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p>

현행	개정
<p>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p>	<p>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p> <p>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생략)</p> <p>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p> <p>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 제74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현행과 같음)</p> <p>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p> <p>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p> <p>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p> <p>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u>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u>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u>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 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75조【준용규정】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p>	<p>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u>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u>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u>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 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 제78조【가산세 등】① ~ ④ (생략)</p> <p>⑤ (생략)</p> <p>1. 2. (생략)</p> <p>3.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⑥ ~ ⑩ (생략)</p> <p>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⑫ ~ ⑭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78조【가산세 등】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⑫ ~ ⑭ (현행과 같음)</p> <p>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p> <p>1.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p> <p>2.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현행	개정
<p>제7조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 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p> <p>제8조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 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p> <p>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9조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채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마. 부과·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현행	개정
<p>●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u>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u>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u>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u> 기한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신설></p>	<p>●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u> 기한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현행	개정
<p><u><신설></u></p> <p>②·③ (생략)</p> <p>●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 ⑧ (생략)</p> <p><u><신설></u></p> <p>⑨ ~ ⑩ (생략)</p> <p>●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 ④ (생략)</p> <p>⑤ (생략)</p> <p>1. ~ 7. (생략)</p> <p><u><신설></u></p> <p>⑥ (생략)</p> <p>1. (생략)</p> <p>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p> <p>1의3. 2. (생략)</p> <p>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p>	<p><u>공휴일</u></p> <p>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⑩ ~ ⑪ (현행 ⑨, ⑩항과 같음)</p> <p>●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p> <p>⑥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p> <p>1의3. 2. (현행과 같음)</p> <p>3. 제45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p>



현행	개정
<p>4. ~ 6. (생략)</p> <p>⑦ (생략)</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생략)</p> <p>⑧·⑨ (생략)</p> <p>● 제35조【국세의 우선】① (생략)</p> <p>1.·2. (생략)</p> <p>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p> <p>가. ~ 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4.·5.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p>	<p>4. ~ 6.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p> <p>3. (현행 2호와 같음)</p> <p>⑧·⑨ (현행과 같음)</p> <p>● 제35조【국세의 우선】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채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p> <p>4.·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p>

현행	개정
<p>④ ~ ⑥ (생략)</p> <p><u><신설></u></p>	<p>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생략)</p> <p>1. (생략)</p> <p><u><신설></u></p> <p>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생략)</p> <p>●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생략)</p>	<p>●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p> <p>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u>소송</u>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p> <p>2. · 3. (생략)</p> <p>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p> <p>5. (생략)</p> <p>③ · ④ (생략)</p> <p>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현행과 같음)</p> <p>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u>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u>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 초과할 때</p> <p>5.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p>

현행	개정
<p>⑥ (생략)</p> <p>● 제47조의3【과소신고·조과환급신고가산세】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생략)</p> <p>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p> <p>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p> <p>라. (생략)</p> <p>2.·3. (생략)</p> <p>⑤ ~ ⑦ (생략)</p> <p>●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 ⑧ (생략)</p> <p>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는 ……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p>	<p>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p> <p>⑦ (현행 ⑥항과 같음)</p> <p>● 제47조의3【과소신고·조과환급신고가산세】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현행과 같음)</p> <p>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p> <p>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p>



현행	개정
<p>1. · 2. (생략)</p> <p>●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생략) <u><신설></u></p> <p>● 제55조【불복】① ~ ④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p> <p>●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생략)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생략)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 다만, 제65조제2항</p>	<p>……·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p> <p>●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 제55조【불복】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 ⑨ (현행과 같음)</p> <p>●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현행과 같음)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생략)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 다만, 제65조제5항(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 다만, 제65조제2항</p>

현행	개정
<p>(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 제61조【청구기간】① (생략)</p> <p>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④ (생략)</p> <p>● 제65조【결정】①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⑥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6조【이의신청】① ~ ⑤ (생략)</p> <p>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p> <p>⑦·⑧ (생략)</p> <p>●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① (생략)</p>	<p>(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61조【청구기간】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는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65조【결정】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66조【이의신청】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략)</p> <p>1. · 2. (생략)</p> <p>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u>경우</u></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p> <p>② (생략)</p> <p>●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생략)</p>	<p>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u>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u></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p> <p>●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생략)</p>
<신설>	
<p>●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p>	<p>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p> <p>5. ~ 7. (생략)</p> <p>③ · ④ (생략)</p> <p>●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① · ② (생략)</p>	<p>●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①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p> <p>3. ~ 6. (생략)</p> <p>④ (생략)</p> <p>●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 ⑤ (생략)</p> <p>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 ⑨ (생략)</p> <p>●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p>	<p>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p> <p>3. ~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의 부과체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체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